

## ■ 베네수엘라 개헌실패 원인 분석과 정국 전망

김 병 권

1998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이래 2002년 쿠데타, 2004년 소환투표 등 숱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온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07년 12월 2일 개헌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시련을 맞았다.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은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온 차베스 대통령이 98년 이래로 치른 12번의 전국적 선거와 투표 가운데 첫 패배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도, 개헌을 지렛대로 집권 2기(2007~2012)를 끌고 가려던 그의 정국구도에 적지 않은 차질을 준 것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나 에콰도르, 니카라과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미지역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개헌안 부결로 인해 차베스 세력이 갑자기 소수파가 된 것도 아니고, 반대파가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된 것도 아니다. 차베스의 임기는 아직 5년이나 남았다. 차베스 표현을 빌면,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은 제 발로 서 있는 권투선수, 즉 혁명이 진진하지는 못했지만 후퇴한 것도 아닌 상황이 현재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베스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극단을 달리는 것처럼, 개헌부결에 대한 평가역시 접근방법과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저조한 우리에게도 베네수엘라 개헌안 부결 뉴스는 관심

대상이었지만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본 글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개헌안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가급적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한편, 차베스와 집권세력이 개헌안 부결이라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 차베스의 개헌제안, 그 배경과 목적

베네수엘라의 현행 헌법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헌법’은 다름 아닌 차베스 자신이 1999년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40년간 기초를 유지했던 61년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문자 그대로 ‘제헌 수준’에서 만든, 8년 역사의 헌법이다.



차베스는 2007년 1월 재선 취임식에서 집권 2기에 실시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5개의 동력’으로 집약하여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헌이었다.<sup>1)</sup>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개헌추진

1) 5대 동력은 (1)수권법(대통령에게 주는 비상입법권) 시행, (2)개헌, (3)볼리바리안 대중교육, (4)국가행정구역 재편, (5)자치권 확대였다. 이 당시 개헌안 내용은 주로 석유산업 국유화나 중앙은행 독립성 폐지와 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일부를 개혁하는 내용들과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정도의 모호한 수준이었다. Gregory Wilpert. 2007. “Chavez Announces Nationalizations, Constitutional Reform for Socialism in Venezuela.” 2007년 1월 8일.

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에는 개헌추진보다는 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지도할 통합사회주의당(PSUV) 건설 준비와 주민자치위원회(Consejo comunal)<sup>2)</sup>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석유산업(오리노코 유전지대), 통신산업(CANTV), 전력산업(카라카스 전력회사 EDC)의 국유화에 집중한다.

차베스가 개헌안을 전격 제안한 것은 2007년 8월 15일이다. 그는 현행 헌법 350조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등 다방면에 걸쳐서 약 10%에 해당하는 33개조항의 개헌을 제안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세 달 동안의 개헌정국으로 돌입한다.

차베스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1999년 헌법은 “모호한” 측면이 많고, “그 헌법이 만들어진 1999년 당시와 지금의 세계는 매우 다르며”,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개헌제안 취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불리바리안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생산모델의 건설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준비하며,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관료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구조를 창설하고, 사회문제에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문화의 영역에서 원주민과 아프리카 후손들을 포괄해서 반제국주의 의식과 애국심을 성숙시키는 것이다”<sup>3)</sup>

결국 차베스는 1999년 헌법이 정치세력 사이의 모호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고, 2005년부터 차베스 자신이 주창한 ‘21세기 사

[www.venezuelanalysis.com/news/2164](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2164)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평의회’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2007), 제3장 참조.

3) Kiraz Janicke. 2007. “Chavez Proposes Changes to Venezuela’s Constitution to Pave Way for Socialism.” 2007년 8월 17일. [www.venezuelanalysis.com/news/2553](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2553)

회주의'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헌법에 반영하고, 헌법의 공신력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드라이브를 걸 필요를 느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차베스가 제안한 개헌의 핵심 내용

현행 베네수엘라 헌법은 총 9장 350조로 이루어졌다. 현대의 헌법으로는 보기 드물게 법률로 유보할 수 있는 세부조항까지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이다.<sup>4)</sup> 차베스는 이 가운데 33개 조항에 달하는 장문의 수정안을 제안했고, 국회에서는 이를 받아 2개월간 심의 끝에 차베스의 원래 제안에 추가로 36개조항의 수정안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개헌안은 두 개의 블록, 즉 '블록A'에는 차베스 대통령이 원래 제안했던 33개 조항에 국회가 추가한 13개 조항 덧붙여지고, '블록B'에는 순전히 국회가 추가로 제안한 23개 수정조항으로 나누어져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블록A'와 '블록B' 각각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투표했던 것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헌내용만 보면 핵심은 (1)지방자치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지방의 관료주의를 제거하겠다는 것, (2)사회복지와 시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3)주민자치위원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권력구조를 구성하겠다는 것, (4)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5)사적 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등, 매우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집권 기도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통

4) 1999년 헌법 한글번역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2007)의 보론에 실려 있다.

령 임기에 관한 230조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230조의 개정안은 원래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한 번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표: 2007년 베네수엘라 헌법 개헌안〉

분야	전체조항	블록A	블록B	주요내용
2장: 지리적 범위와 정치행정구역	9조	3조	-	행정구역재편
3장: 시민의 권리와 의무	116조	11조	7조	16세로 선거권 연령확대, 성차별 금지 충분한 주거권의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기금 설치 36시간 노동제 실시(주 44시간→36시간)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4장: 공권력	49조	11조	4조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중 권력의 창설 지역공동체수준으로 권력의 분권화 다극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대외 정책
5장: 국가 공공기관	114조	6조	9조	연임제한 철폐
6장: 사회경제체제	22조	10조	-	사적 기업의 역할 약화 석유산업에 대한 사유화 금지 휴경지에 대한 과세 강화 중앙은행 독립성 폐지
7장: 국가안보	11조	2조	-	반제국주의 군대로 군대의 역할 재정립
9장: 개헌	11조	3조	3조	개헌 발의할 유권자의 비율을 증대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권력 지형(Nueva Geometría del Poder)’이라고 하는 조항이다.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고 동시에 자치권력 구조도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인데, 이는 단순히 현재 지방에 관료주의와 반 차베스세력이 완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이들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차베스는 2006년부터 풀뿌리에서 조직하기 시작하여 이미 2007년 초에 1만개를 넘어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반으로 기존 지방자치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구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집권 2기 '5대 동력'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단 전국적으로 중산층 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약 6만 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차베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자치위원회(6만개) -> 코문(1만개) -> 사회주의 도시(3천개) -> 연방지역(200개)로 통합시켜 나감으로써 기존 지방 기득권 권력과 관료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국가구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차베스가 구상하는 사회주의 국가모델이자 사회주의 국가건설 경로이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차베스가 개헌이 실패한 후 올해 연초에, 개헌이 좌절됨으로써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많은 변화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애석해하면서 특히 '정치적·영토적 재구획'은 헌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전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탄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구역 재편이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차베스가 구상하는 사회적 경제모델에서 소유권을 새로 건설되는 지역공동체(코문)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지금까지 실험해왔던 '국가소유/국가경영 모델'이나, '공동경영모델'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소유, 경영모델, 즉 '지역 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

는 기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아닌 코뮌에 의한 소유 제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개헌안에는 “국가는 서로 다른 생산양식과 경제적 소유단위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개발한다. 직접적 또는 공동체적 통제에서부터 간접적 또는 국가적 통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차베스는 2007년 이미 200개의 사회주의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중반까지 66개를 주로 외국과의 합작 방식으로 건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 공장에 공동체적 소유와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실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도 아니고 해당 기업의 직원도 아닌 지역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 모델, 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가칭 ‘이해당사자 사회주의’, 또는 ‘분권형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지역공동체의 창설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 결과 분석

12월 3일 시행된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는 부결이었다. 블록A는 반대 4,504,354(50.7%), 찬성 4,379,392(49.29%)로 부결되었고, 블록B는 반대 4,522,332(51.05%), 찬성 4,335,136(48.94%)로 부결되었다. 1.5% 미만(15만 명 미만)의 근소한 차이다. 연임제한 철폐 항목이 들어가 있는 블록A 보다 국회가 제안한 블록B가 오히려 찬성이 적게 나온 점이 흥미롭다.<sup>5)</sup>

5) 각종 선거 결과는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 참고.  
[www.cne.gov.ve/divulgacion\\_referendo\\_reforma](http://www.cne.gov.ve/divulgacion_referendo_reforma)



개헌 '찬성'이라는 깃발을 들고 가두행진에 나선 시민들(왼쪽 사진)과 베네수엘라헌법 책자를 들고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반차베스파 시민들(오른쪽 사진)

개헌안 부결 투표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방법은 바로 바로 1년 전인 2006년 12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투표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당시 대선에서는 천백만명(11,790,397명으로 투표율 74.69%)이 참여하여 차베스 지지가 7,309,080(63%), 야당의 대표인 로살레스 지지가 4,292,466(37%)였다.

두 선거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우선, 반차베스 득표율이 대선에서 약 430만 명이었던 것이 개헌투표에서는 450만 명으로 20만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반차베스 캠프는 세력과 지지기반을 늘리지는 못했으나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차베스 지지세력은 대선에서 730만 표였지만 개헌안 투표에서는 4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300만 명의 차베스 지지자들이 적어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반대파의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의 실패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은 틀림없다. 차베스 지지자들에게 신임이 있었던 바두엘 전국방장관이 결정적으로 개헌 반대편에 가담했고, 주요 차베스 지지정당의 하나이자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인 포데모스(Podemos)의 반대, 그리고 반미적인 차베스를



꺼려왔던 미국의 반차베스 세력지원 등의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차베스 지지세력 내부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핵심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적 개헌 좌절과 이후 전망

### 1) 개헌안이 너무 복잡해서 개헌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차베스 지지자들은 내부 결집에 실패하고 300만의 기권자들을 만들어냈을까?

우선 가장 널리 지적되기도 하고, 주로 개헌실패 초기에 지적되던 것이 바로 “개헌안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69개조 개헌안이라는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았다.”<sup>6)</sup> “차베스가 제안한 33개 조항이면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새로운 권력지형 형성’처럼 복잡한 것이었다.”<sup>7)</sup> 차베스 캠프에서는 “개헌에 대해 절대 ‘NO’라고 하지 않은 300만의 차베스 지지자가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회의적이었으며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베네수엘라에서는 개헌안의 일부 사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차베스 지지자들이 단지 투표 불참을 선택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 2)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내용, 국민 참여 없었던 개헌과정

6) Clifton Ross. 2007. “The Venezuelan Referendum.” 2007년 12월 4일. [www.dissidentvoice.org/2007/12/1247](http://www.dissidentvoice.org/2007/12/1247)

7) 전 부통령 랑헬은 국회가 차베스가 제안한 33개 조항에 대해 추가개헌 조항을 넣지 말아야 했다면서 한 발언이다. Chris Carlson. “Pro-Chavez Leaders Examine Reasons for Venezuelan Referendum Loss.” 2007년 12월 6일. [www.venezuelanalysis.com/news/2969](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2969)

두 번째 지적은 개헌 추진과정이 전혀 베네수엘라 국민의 참여 없이 매우 엘리트주의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유난히 강조한 개헌안 내용 자체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앞서 지적한 대로 개헌 내용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하게 되는 핵심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차베스 핵심 측근들만의 폐쇄된 논의 끝에 33개 조항의 개헌안이 갑작스럽게 국민에게 발표되었고, 여기에 국회 내부의 소수그룹들이 다시 2개월 동안 개헌안을 붙들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개헌 항목에 36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혼란은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헌 찬성 캠페인은 국민투표 불과 한 달 전인 11월 2일부터 본격화된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은 대중에게 개헌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교육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고 설명해야 할 개헌조항도 너무 많았다. 차베스 반대자들은 심지어 개헌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약화될 것이고 모든 사유자산이 결국 국가에 의해 몰수될 것”이라는 투의 과장되었지만 단순한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들이 이런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지만,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게 할 정도로 충분했다.

투표 직전에 이를 인지한 차베스가 “찬성표는 나에게 대한 지지표이다”라고 말하며 개헌찬성 캠페인을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즉, 개헌안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복잡하자 차베스는 개인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지만 때가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심각한 우유부족현상, 신선한 우유를 구할 수도 없었고, 분유를 구하기도 매우 어려웠던 식료품 부족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 3) 차베스 지지층 내부의 조직적 취약성 노출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차베스 지지층 핵심부에 있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정치과정은 세 개의 축, (1)주민자치 위원회의 전국 확대, (2)통합사회주의당(PSUV)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중 정당의 건설, (3)개헌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추진되던 과정이었다. 차베스는 이 세 개의 과정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개헌이 충분히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아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못했다.

우선 통합사회주의당에 당원 가입을 신청한 국민이 공식 집계로 2007년 6월 말 현재 약 570만 명이였다. 이들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투표만 했더라도 개헌안을 가볍게 통과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일반 차베스 지지자도 아니고 혁명 정당의 당원이 되겠다고 신청한 570만이 개헌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않았을까?<sup>8)</sup>

실체를 보면 이렇다. 통합사회주의당 당원 신청 접수를 받은 6월 말 이후 지역모임을 열고 있었는데 지역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공식적인 주장으로는 전체 가입신청자 570만 가운데 25퍼센트인 140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15퍼센트 수준인 9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sup>9)</sup> 창당추진 지도부의 부실한 조직과정을 보여주며 똑같은 방식이 개헌캠페인에도 적용된다.<sup>10)</sup>

8) 차베스 캠프 지도자들 역시 도대체 570만 국민이 통합사회주의당 가입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400만 정도만 찬성투표를 했는가 하며 당혹해하고 있다. Chris Carlson, *Ibid.*

9)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베네수엘라 좌파정치에서 이처럼 방대한 대중조직을 건설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문화가 없다는 데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570만의 당원 가입신청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조직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단순하게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iraz Janicke. 2007. “The Battle for the 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 2007년 12월 1일. [www.venezuelanalysis.com/analysis/2939](http://www.venezuelanalysis.com/analysis/2939)

10) 애초에 2007년 12월에 창당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어 2008년으로 넘어왔는데 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는 3만개였다. 그러나 올해 초에 재확인한 수자는 1만8천개였다. 한해에 5만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건설하겠다는 식의 자의적인 목표설정을 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속도조절이 되지 못하고 무리한 추진을 하여 수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이다.

차베스는 “지도자들의 주장과 정치적 실제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결국 그 때문에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는 혁명에 대한 국민의 확신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개월 동안 식료품 부족 현상이 극심했는데도 정부 관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정부의 개헌안에 확신을 갖고 투표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개헌을 부결시킨 것은 차베스 정부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투표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결국 근본원인은 차베스 내부의 정치세력이 관료주의와 행정주의 경향이 완고하게 살아있고, 정치적 결속력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조급하게 혁명을 심화시켜나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신뢰와 확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적 아젠다를 전신시킬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차베스를 지지하는 핵심 정치세력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

국 창당도 개헌도 모두 매듭지어지지 못한 것이다.

---

#### 4) 차베스 자신의 평가: 지나온 혁명에 대한 차분한 재평가

차베스는 개헌 투표결과가 채 완료되지도 않았던 12월 3일 새벽 투표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패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헌부결 직후에 차베스는 여전히 매우 완강했다. 2월 3일 새벽 언론 생방송을 통해, “제가 이 개헌안의 토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이 개헌안을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며 이 개헌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개헌안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개헌 이슈를 부활하는 데 대해서도 차베스는 초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개헌실패 직후 차베스는 국민발의 개헌을 언급하면서 이를 향후 개헌 재추진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 베네수엘라 현행 헌법에는 등록 유권자 15퍼센트가 찬성하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sup>11)</sup> 차베스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 직후 국영TV인 V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개헌제안 발의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직 5년이나 남은 내 임기 안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개헌을 발의할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sup>12)</sup>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2008년, 또는 3년 안에 또 다른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2007년 개헌안)과 똑같은 필요는 없다. 방향만 같으면 될 것이다. 나는 매우 복잡한 개헌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개선되고 단순화된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2008년에 들어서면서 차베스는 매우 침착

11) 헌법 341조에는 개헌안 발의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시민들의 15퍼센트의 발의, 의회제적의원수의 30퍼센트, 또는 각료회의의 승인을 통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12) 베네수엘라 헌법 345조 “통과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발의안은 의회에 동일한 입법회의 기간 안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하게 베네수엘라를 이끌고 갈 것임을 연속해서 밝히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새해 1월 6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대통령’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2008년은 평가와 조정, 재도약의 해라고 선언하고 “모든 것을 재평가 하겠다”고 다짐했다.<sup>13)</sup> 나아가 그는 “나는 행진속도를 늦추고자 한다. 나는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뛰어넘는 행진속도를 부과해왔다. 나는 이것을 수용한다. 이것이 나의 실수 가운데 하나다”<sup>14)</sup>라고 고백하며 혁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개헌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네수엘라 환경이 차베스에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유가가 받쳐 주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4년 이후 5년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전히 18퍼센트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일부 생필품 부족을 제외한다면 2007년 성장률도 10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비공식 부문 종사자와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sup>15)</sup>

차베스는 2008년 1월 4일 부통령을 포함하여 27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개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개헌실패

13) Chris Carlson. 2008. “Venezuela's Chavez Announces Plans for Rectification and Continued Advance.” 2008년 1월 7일. [www.venezuelanalysis.com/news/3038](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3038)

14) Federico Fuentes. 2008. “Venezuela's Chavez: Socialism Still Our Goal.” 2008년 1월 21일. [www.greenleft.org.au/2008/736/38128](http://www.greenleft.org.au/2008/736/38128) Green Left Weekly

15) Chris Carlson. 2007. “Venezuela Enters Fifth Consecutive Year of Economic Growth.” 2007년 12월 20일. [www.venezuelanalysis.com/news/3023](http://www.venezuelanalysis.com/news/3023). 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2008년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04년 이래로 5년째 성장세이다. CEPAL에 따르면 2007년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률은 8.5퍼센트로 파나마(9.5%)와 아르헨티나(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내수 구매력을 연간 8퍼센트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실업률은 2007년 11월 6.3퍼센트로서 전년 동기 대비 2.5퍼센트가 떨어졌고, 공식부분 종사자도 55.6퍼센트로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요약한 글은 다음 참고. Mark Weisbrot and Luis Sandoval. 2007. “The Venezuelan Economy in the Chavez Years.” 2007년 7월. [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venezuela\\_2007\\_07.pdf](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venezuela_2007_07.pdf).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2007), 제4장 참고.

를 털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 부통령은 실무형의 주택부장관인 라몬 카리살레스(Ramón Carrizales)를 임명함으로써 행정부는 정치적 행보 보다는 당면의 고질적 민생문제, 즉 주택건설, 쓰레기 처리, 물가관리, 범죄대책, 식료품 부족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차베스는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주의 아젠다에 대한 동의 틀을 다지기 이전에 아직 창당이 완료되지 않은 통합사회주의당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이후 ‘21세기 사회주의’ 도약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다시 쌓으려는 계획이다. 전 부통령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를 통합사회주의당 전국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겨 통합사회주의당 건설에 전념하기 위해 맡게 한 것이나, 연초인 1월 12일 창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창당될 당 강령 초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2008년은 차베스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당 건설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8년 연말은 주정부와 시장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지자체 선거 결과를 보면 개헌 부결의 흐름이 오직 예외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이후 대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김병권 - 민간 진보 싱크탱크를 표방한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이다. 저서(공저포함)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 창, 2006),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2007)가 있다.

---